

전기사업 입장에서의 에너지문제 해결

K.Abe

中部電力(株)회장

금년 4월 전기사업법의 근본적 개정은 전기사업의 개를 위한 새로운 체계가 되었다. 법개정의 배경에는 일본의 전력업계가 직면하고 있는 규제 완화의 추세, 내외가격차, 수급 압박의 3대과제가 존재한다.

규제완화 추세

일본경제구조의 근저에 있는 시스템은 대량생산에 적합하여, 산업발전과 국민생활의 안정에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전후 반세기가 경과하고 경제가 성숙하면서, 획일적인 대량생산 보다도 다양성과 창조성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공적규제나 정부지도는 경직된 경제구조를 더욱 악화시키고, 일본의 활력과 유연성을 저해한다는 우려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세계 각국이 현재 정치·경제의 격변기에 있기때문에 정치, 경제, 사회구조의 광범위한 개혁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규제완화도 이 시대의 커다란 추세

의 하나임이 분명하다.

전기요금의 내외가격차

엔고현상은 일본의 수입가격을 낮추고, 일본국민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그런데 실상은 수출기업에 타격을 주어 해외로 생산거점을 이전시키는 산업공동화 현상을 가져오는등 부정적인 효과만 부각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경직적인 체제로 일본국민들이 엔고의 장점을 누리지 못하게 막는다고 한다.

전력업계에서는 고객들에게 엔고차익을 환원하기 위해 계속해서 전기요금을 낮춰왔다. 지난 2년간 급속히 진전된 엔고에 대응해서 3회의 잠정적인 요금인하를 실시했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 비해 일본의 전기요금은 아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요금을 더 내려야 한다는 비판을 받고있다. 이러한 비판은 외국과 직접 경쟁을 해야하는 수출 기업들로부터 특히 강하게 받고있다. 내외가격차

는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약화시키게 되므로 가격차를 없애거나 줄여줄 것을 점점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전기요금의 내외가격차가 존재하는 원인에는 높은 토지관련비용, 높은 환경보호 수준, 고객들의 전기품질에 대한 요구가 엄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여러요인들은 전력업계 단독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일본의 전기요금은 구매력 평가로 환산할 경우 다른 주요 선진국에 비해 싼편이다.

그렇지만, 전기사업자들은 경영합리화 및 비용감소 노력을 계속하고, 내외가격차를 없애거나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수급압박

앞으로의 경제성장이 완만하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산업계의 전기수요가 미세한 증가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상업 및 가정용등 민생용 수요가

비교적 높은 증가를 보일 것으로 예상돼, 전반적인 전기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이다. 경제의 성숙화로 국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사회를 고려하면, 안전, 청결, 편리성의 특징을 가진 전기는 그 수요가 증가할 수 밖에 없다.

앞으로 10년간 전기수요가 매년 2.3%정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일본의 무더운 기후조건으로 에어컨의 수요가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돼, 하계 피크수요시의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전력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계획적이고 착실한 전원개발이 필요불가결하다. 그러나 일본은 발전소 부지로 적합한 장소가 점차 줄어들고, 전원개발의 리드타임이 길어져 입지선정에서부터 운전개시까지는 20년이상이 소요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신규전원 개발의 정체와 공급시설 증대계획의 차질로, 가까운 장래의 수급이 압박받는 상황이 닥칠 것으로 우려된다.

위에서 설명한 「규제완화의 추세」, 「내외가격차」, 「수급압박」3가지의 원인으로 32년만에 전기사업법이 개정되었으며, 에너지부문의 새로운 경쟁시대에 접어들었다.

전기사업법 개정의 주안점은

다음 세가지에 있다.

- ① 경쟁원리의 도입 (전원조달에 입찰제도 도입등)
- ② 요금제도의 개정
- ③ 각자책임원칙을 중시하는 안전규제의 합리화

신시대가 도래했지만, 전력은 국민생활의 안전과 경제, 산업발전의 기반이다, 안정공급이 전기사업자에 부과된 사명임에는 변화가 없다.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개정된 전기사업법의 체계 내에서, 고객의 장기적인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사업경영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전기사업자의 역할이다.

에너지부문의 트릴레마

일본의 전기사업자들은 새로운 규제체계를 환영하면서도, 「안정적 공급」, 「효율성」, 「지구적 규모의 환경문제」라는 세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 세가지 문제중 하나를 해결하기도 힘들지만, 3가지가 상호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즉 안정공급을 위해 시설투자를 늘리면, 자본비용이 증가하여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되고, 더 많은 시설과 장비도입은 환경문제에 보다 큰 짐이 된다.

효율향상 노력은 요금인하에 도움이 되지만, 요금인하는 전기

수요 증가로 연결된다. 동시에 비용저감 노력이 설비투자 제약으로 연결되면, 공급시설 확대가 어렵게 되어 수급압박에 직면하게 된다. 또한 효율향상 노력은 환경대책 투자를 감소시켜, 환경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환경문제의 지나친 강조는 공급설비의 확대를 제약하게 되며, 안정공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환경비용 증가는 전기요금 인상을 가져올 것이다.

트릴레마의 극복

국내대책

① 최적 발전 믹스

공급의 안전성, 경제성, 환경부하특성, 운전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발전연료 믹스를 추구하는 것이 전력업계의 의무. 이를 위해 원자력 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 원자력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PA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이다.

② 기술개발

에너지효율 향상과 환경보호를 위해서 신기술과 신에너지의 연구개발을 강화할 것임. 효율적인 에너지이용을 위해 화력발전소에 복합사이클 발전기술을 도

(82페이지에 계속)